

범죄수괴 이건희를 당장 구속 처벌하라

반삼성투쟁의 선봉 권영길을 지지하라

삼성·BBK 비리 척결!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파병 재연장 반대!

일시: 12월 1일(토) 오후 4시 / 장소: 서울역(가안)
주최: 2007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

제2차

범국민 행동의날



‘삼성 제국’에
맞선 투쟁

– 삼성정 의원 인터뷰
– 이견희를 망신시켰던
고려대 출교생
–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죽음

11~12면

2007 대선 정치 상황 조망

– 이명박 폭탄의 노관 BBK

3~4면

2007 대선과 민주노동당

4면



MF 이후 10년,
한국 사회의 변화

6~7면

크리스 하먼

– 세계 경제 위기의 전망

7면

존 몰리뉴 칼럼

– 자본주의와 기후 변화

8면

국제

– 프랑스

반사르코지 투쟁의 1라운드

– 오스트레일리아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5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서평 <추적 한국의 건강 불평등>
신자유주의가 낳은 끔찍한 건강 불평등을 고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소개한다.

일본 좌파 활동가 인터뷰

일본의 반신자유주의 단체인 POSSE의 리더에게 일본 정치 상황과 민중 운동에 대해 들었다.

신자유주의에 투항한 좌파 정부에 맞서는 인도 농민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호부터
발행일이 하루 늦춰집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 섹시크럽, 미모의 아가씨 1백 명 향시 대기, 팀 4만 원”

－ 이명박 소유 양재동 영일빌딩에 현재 걸려있는 간판

“저는 가난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주변에선 이런 저를 두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윙통성 없다’는 등 말이 많았다.”

－ 역시 막말의 대가 이명박

“정직하지 못해서 정직을 가훈으로 삼았나”

－ 이명박의 가훈은 ‘정직’이라는 애기를 들은 이회창 캠프 반응

“이회창은 먼저 인간이 돼라”

－ 김영삼
(둘 다 인간이 좀 됐으면...)

‘후보를 가능한 한 (방송)토론에 내보내지 않는다’

－ 이명박 후보의 TV토론 전략을 연구한 이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 위기, 국민은 불안! 전국위원회소집, 재신임 물어야! 유비무환”

－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내진 괴문자메시지

“[청와대 386의] 반주는 으레 소주였고 양주 이야기를 꺼내면 물매라도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몇 달도 안 돼 양주가 등장하고 식사 때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호텔식당이나 레스토랑을 거리낌없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

－ 전 경찰총장 허준영

“뇌물을 받으면 상급자들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 현재로선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이다.”

－ ‘땃땃한’ 청와대

이주노조 지도부 싸늘이 표적 연행

까지만 · 라주 · 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게 잡혀 갔다.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은 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십수 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라주 부위원장은 작업장을 찾아 온 4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출입국관리소 ‘인간사냥꾼’들은 불법 · 표적 · 폭력 연행도 모자라 까지만 위원장의 손에 수갑까지 채웠고, 3명 모두 청주보호소로 끌고 갔다.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은 2007년 초부터 이주노조를 이끌어 왔다. 마숨 사무국장은 2년 동안 이주노조에서 상근하며 노조 살림을 도맡아 온 헌신적인 활동가였다.

이 동지들은 한미FTA 반대 운동, 반전 운동, 이랜드 연대 투쟁에도 빠지지 않은 진정한 투사였다.

라주 부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은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했다. 라주 동지는 어려운 형편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선전을 바라며 특별 당비까지 냈고, 마숨 동지는 서울시장 대의원으로로서 당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몇 달 동안 야만적인 단속 추방을 강화해 왔다. 8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만 무려 2천5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추방했다. 다른



(왼쪽부터)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제는 경찰까지 단속에 합세하고 있다. 11월 14일 대구에서는 임신 8개월인 필리핀 여성이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는 경찰의 불법적 단속에 항의해 5개월째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싸우고 있다.

정부는 단속 강화뿐 아니라, 난민을 공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고 결혼 이주자 국적 취득 제한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2월 9일 세계이주민의날 기념 집회를 준비하며 정부에 맞선 저항을 조직해 왔다.

중국 동포 3백 명이 단속에 항의해 농성에 들어가다

지난 11월 25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국인 교회(담임목사 김해성)에 법무부 수원출입국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중국동포의 집’ 앞에서 단속반원들을 보고 황급히 피신한 3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잡기 위해서였다.

단속반은 항의하는 신도와 목사들을 “교회라고 (단속을) 못할 게 뭐냐?”며 거칠게 밀치고 들어와 교회 기물들까지 파괴했다. 이들의 난폭한 태도에 겁을 먹은 이주노동자 2명이 도망치다 옥상에서 뛰어내려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경기도 화성 발안, 성남, 서울 등지의 ‘중

국동포의 집’은 이런 막무가내식 단속에 항의해 11월 26일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회관에 모여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단 약 3백 명은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사건 책임자 처벌,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극심해진 이주노동자 단속의 한 단면이다. 11월 들어 이주노동자 단속은 전국 각지에서 매우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억압과 차별에 항의해 온 운동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조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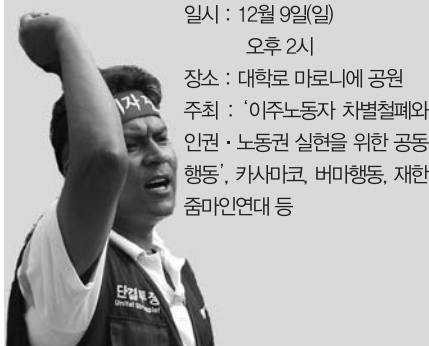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난민 권리 공격 반대! 이주민 차별 철폐!

2007 세계이주민의날

기념 집회

일시 : 12월 9일(일)
오후 2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카사마코, 버마행동, 재한 쯤마인연대 등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무늬만 바꾼 파병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참가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군 부대 파견 성과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계속 동참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을 현지에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낳은 유일한 ‘성과’는 한국 민간인의 납치 · 살해라는 비극이었다.

한국 지역재건팀이 민간 주

도라는 것도 순전한 거짓말이다. 정부가 밝혔듯이 지역재건팀에는 참모장교와 군 의료진이 포함된다. 군조직의 일부인 것이다. 게다가 한국 지역재건팀은 악명 높은 바그람 기지에 주둔하게 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통제를 따르게 된다. 외교통상부 자료를 보더라도 지역재건팀의 임무에는 “치안 유지 · [탈레반] 무장해제 · 아프가니스탄 군경 훈련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또,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 7진 2차 교대병력 3백여 명을 11월 26일부터 현지로 보내려 한다. 국회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교대병력을 먼저 보내 두고 대선이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반전 운동은 파병 연장 동의안이 조용히 통과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에 누가 되는 파병은 다음 정부에서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김용욱

조민호를 석방하라!

이랜드 투쟁에 연대한 ‘죄’로 11월 7일 연행 · 구속된 조민호 동지는 열악한 시설로 유명한 성동구 치소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동지들을 걱정하며 곳곳이 투쟁하고 있다.

검찰은 조민호 동지가 특정 전경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까지 억지로 뒤집어 씌워 기소했다. 조민호 동지는 경찰과 검찰의 온갖 회유와 비아냥, 협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투지를 꺾지 않고 있다.

조민호 동지의 이랜드 연대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익변론의 형태로 수임료를 거의 받지 않고 조민호 동지의 법정 투쟁을 조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이랜드 노동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의 활동가들도 하루도 빠짐없이 조민호 동지를 면회해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다. 11월 24일 흠버머 면목점 앞에서 열린 연대 집회에서 조민호 동지 후원금이 순식간에 20만 원이 모였다.

조민호 동지의 첫 번째 공판은 12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북부지방법원 103호(태ungs구역 하차)에서 열린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류민희

혼탁한 아수라장 속에서 진보의 몫을 확대하자

전지윤

이제 20일 정도 남은 대선 정국은 갈수록 혼탁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부패와 비리로 우열을 다투는 이견희와 이명박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온 나라를 역겨운 악취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개혁과 진보에 대한 대중의 기대 속에 집권했지만 5년 후에 남은 것은 쓰라린 배신감뿐이다. 노무현은 전쟁광 조지 부시와 부패 재벌 이견희의 기대만 충족시켜 왔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집권 10년은 우리에게 “되찾은 10년”이 아니라 ‘배신의 10년’이었다. 저들은 친미독재적 우파한테서 권력을 되찾아 준 대중의 개혁과 진보 염원을 배신하고,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우파에게는 “[권력을 부분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긴 했지만, 우파들의 기득권과 낡은 가치들은 분실되지 않았다. ‘한미FTA 대연정’, ‘파병 연장 대연정’, ‘이견희 구하기 대연정’에서 보듯 노무현은 핵심 문제에서 우파의 뜻을 대변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잃어버린 것은 민주개혁과 사회 진보의 가치였다.

배신과 실패로 중도개혁 정부의 지지 기반은 붕괴해 버렸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 양극화의 오른쪽 수혜자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이다. 2002년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30퍼센트가 지금은 이명박을 지지한다. 이 ‘산토끼’들의 지지로 이명박은 50퍼센트가 넘는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명박은 이런 ‘산토끼’들을 의식해 우파적 본색 드러내기를 꺼린다.

사람들은 범여권에 대한 사무치는 증오 때문에 ‘비리 재판기’ 이명박의 악취를 참아 왔다. 그래도 비리로 인한 이명박 ‘유고’ 가능성은 계속 제기됐다. 이 틈을 파고든 게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이명박의 우파적 선명성 부족도 비판해 우파 ‘집토끼’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이명박과 이회창이 지지율 1·2위를 다투며 지지를 함께 60퍼센트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극우의 조갑제는 이것을 ‘보수의 확장’이라고 반기며 “이회창 때문에 발뻘고 잔다”고 좋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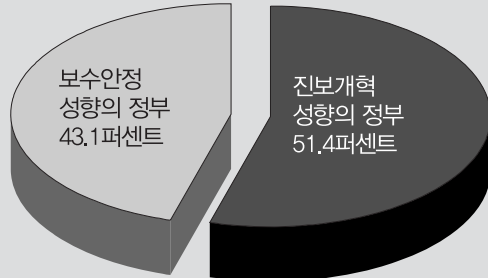
아수라장

그러나 우파의 꿈은 깨지고 있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던 유리창 같은 이명박 지지 위로 BBK라는 돌덩이가 날아 왔다. ‘비호감’인 이명박보다 ‘국제사기꾼’ 김경준이 더 신뢰가 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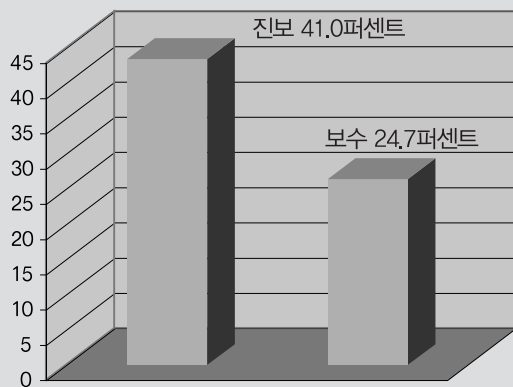
그런데 이명박에게서 달아나는 ‘산토끼’들이 이회창에게 갈 리는 없다. 결국 ‘산토끼’들은 빠져 나가고 전통적 우파 지지자마저 이명박과 이회창으로 분열하면 우파의 권력 탈환의 꿈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뉘지게 맞아야 한다”는 우파들의 분노가 이제 이명박을 향하기 시작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성향의 정부가 탄생되면 좋겠는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이념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깝나?



11월 19일 경향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이명박·이회창의 지지율이 보수 지지 여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지지가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했다. 조갑제는 “이명박 후보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외통수 게임을 하고 있다”고 타박했다. 전 자민련 의원 이동복은 “이번에 실패한다면 이 후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를 박근혜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층을 동반자 살로 몰고”(전 외무 대사 이장춘) 가는 책임을 이명박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 온갖 불법 행위와 비리로 권력과 부를 쌓아 온 이명박은 한국 우파의 표준일 뿐이다. 불법과 비리는 마치 DNA처럼 박혀 있는 우파의 본령이다.

이명박과 이회창이 끝까지 아귀다툼을 할지, 누구로든 막판에 단일화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우파의 위기가 정동영과 범여권의 기회가 되고 있진 않다. 정치적 양극

화 속에 중도개혁 세력의 다계급적 지지 기반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했기 때문이다. ‘도로열우당’ 재결집은 지지자들을 불러모이지 못했다. “전환의 파장을 일으킬 출구”(‘안희정 리포트’)라던 남북정상회담 효과도 반짝이었을 뿐이다.

정동영의 ‘좌회전’도 효과가 없었다. 개혁 염원 대중을 겨냥한 개혁적 ‘말’과 자본가적 계급 기반에서 비롯하는 보수적 ‘행동’의 차이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에게서 빠져 나온 ‘산토끼’들은 범여권으로 돌아가기보다 부동층이 되고 있다.

좌회전

범여권에 실망해 왼쪽으로 이탈한 대중을 차지하려던 문국현의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여권의 해체가 가져온 아웃사이드(인 문국현) … 의 정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에 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김영춘의 궤적 — 386운동권에서 한나라당과 열우당을 거쳐 온 — 도 이런 의구심을 불러온다.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은 노무현 정권의 해체된 지지 기반 중 일부 개혁적 자본가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비판하며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는 것이다. KT 사장 출신인 이용경이 공동대표인 창조한국당이 한미FTA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선 공천권 등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정동영과 문국현, 이인제 등이 단일화를 이룰지도, 그 단일화가 범여권의 지지

기반을 복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불분명하다.

지난 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발표한 ‘유권자 성향 분석 결과’를 보면 차기 정부가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답은 17.3퍼센트뿐인 반면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답은 39.8퍼센트였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소는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치 양극화와 열우당 붕괴에서 비롯한 거대한 정치적 공백이 정치적 역동성을 만들어 냈다. 붕괴한 열우당에서 왼쪽으로 이탈한 개혁 염원 대중은 지금 여기 저기를 떠돌고 있다.

범여권도 우파도 이들에게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이들이 통일선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결국 이번 대선 결과는 BBK의 파괴력, 삼성 비자금 사태의 파장, 우파·범여권 진영 각각의 아귀다툼의 향배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 될 것이다.

뒤끝

이번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뒤끝이 좋을 리 없다.”(〈조선일보〉) 노무현도 최근 “중간에 안 쫓겨 나오고 무사히 마치고 나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든 임기를 채우기 힘들지도 모른다. 누구든 개혁과 진보 염원 대중의 기대를 배반해 반발에 직면하며 권력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덧붙여 우파는 비리 의혹 때문에, 범여권은 우파의 반동 시도 때문에 시달릴 것이다.

지난 10년은 개혁사기꾼들과 부패한 우파의 공모 속에 민주 개혁과 사회 진보의 가치를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우파와 범여권 중 누가 권력을 잡든 신자유주의와 친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며 이런 진보의 가치를 더욱 짓밟을 게 뻔하다. 당장 대선 직후 한미FTA와 파병 재연장 통과에서 이들은 협력할 것이다.

민주 개혁과 사회 진보의 가치를 일관되게 대변해 온 것은 바로 조직 노동자들에 기반을 둔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다. 〈한국일보〉 고종석 논설위원도 인정했듯이 “민노당은 유일하게 삼성 재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는 제도권 정치세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 개혁과 사회 진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압력에도 휘둘리지 말고 권영길 후보 지지를 통해 자신들의 염원을 표출해야 한다.

지금 이견희의 범죄에 분노하는 여론, 한미FTA를 반대하는 여론,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는 여론, 파병 재연장에 반대하는 여론은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계속해서 더 폭넓게 이런 여론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며 대선에서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 나아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이런 광범한 여론을 대변하는 행동을 건설하며 새 정권 하에서 더 강력한 반전·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BBK는 우파의 권력 탈환의 꿈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뇌관이 되고 있다

BBK 의혹 —

드러나는 이명박의 거짓말과 범죄들

BBK로 인해 대선 판도가 어지럽다. 김경준과 그 가족은 차례차례 귀국해 기자회견을 열며 이명박의 범죄 혐의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이 폭로한 ‘이면계약서’가 진짜라면 “BBK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우겨 온 이명박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그런데 ‘이면계약서’와 실제 계좌 흐름이 일치한다.

현재 김경준 남매의 주장은 거듭 거듭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의심스러운 말바꾸기를 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면계약서’에 사용된, ‘가짜 도장’이라던 이명박의 인감이 반나절만에 ‘말긴 도장’으로 둔갑했고 이명박의

귀국 시점도 오락가락했다.

조갑제도 “김 씨와 한나라당 측의 진실 공방전에서 연일 한나라당 측이 밀린다. … [한나라당이] 좌충우돌식으로 대응한다”고 꼬집었다.

좌충우돌

거짓말로 다른 거짓말을 돌려막는 식의 해명이 의혹만 키우자 한나라당은 BBK 관련 모든 토론을 거부했다. 에리카 김을 인터뷰한 MBC 에게는 “집권하면 민영화시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도 “뭐가 이렇게 많냐”는 불만으로 술렁대고 있다. 김용갑도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당당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장이던 유석춘은 이회창 지지로 돌아섰다.

10년을 벌려 온 ‘정권 교체’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우익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조갑제는 “한나라당이 여기까지 온 데는 조중동의 이명박 감싸기가 상당히 작용”했다며 ‘이명박 짜라시’들을 꾸짖었다. 반면 <조선일보> 주필 강천석은 “모든 게 이명박 후보의 허물에서 비롯됐다”며 ‘재산 헌납 선언’을 요구했다.

더구나 이명박 부인의 보석 밀수 의혹과 이명박 두 딸의 줄리어드 대기부금 입학설도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이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라는 게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남성주

진보의 길을 포기하라는 협박은 그만해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반한나라당 전선’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고은 시인과 백낙청 교수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한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최대한의 단일화를 이뤄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의 막판 정책연대까지 염두에 둔 광폭 단일화”(정대화 교수), ‘민주노동당까지 하나로 묶는 연합정부론’(황석영 작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대체로 한나라당의 집권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이명박과 이회창 같은 썩어 문드러진 우익들이 집권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 반대하기 위해 ‘오십보

백보’ 차이밖에 없는 범여권과 연합할 수는 없다. 더구나 독자적 진보 정치와 정책을 표현할 기회까지 포기하면서 말이다.

게다가 백낙청 교수 등의 바람과 달리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나 연대할 정책이 없다.

가치

한미FTA, 비정규직, 파병, 삼성 비자금 사태 등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에서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최근 범여권 후보들이 켜고 있는 ‘왼쪽 깜빡이’가 아니라 지난 5년간 그들의 실천을 직시하면 이것은 명백해진다.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이런 차이는 계급적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

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범여권과 달리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민중의 당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에게 범여권과 손을 잡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결국 계급연합을 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계급연합은 범여권을 견인하기는커녕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활동을 범여권의 통제에 종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식의 계급연합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두 계급 사이의 화해를 위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운동을 건설할 수 없게 만든다.

우익뿐 아니라 범여권과도 독립적인 세력을 결집하고 이들 모두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해야 할 일이다.

장호중

민주노동당

비판은 협력적 선거 운동과 결합돼야

진보정치연구소 조승수 소장은 최근 당내 다수파인 자민통 경향이 자신의 정치 강령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밀어붙이자 “나는 선거운동 못할 것 같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상이한 정파들의 연합인 민주노동당에서 자민통 경향의 이런 태도는 물론 잘못이지만 조승수 소장의 반응도 옳지 않았다. 비판할 것을 비판하면서도 대선 운동에서는 협력하는 게 옳다.

그런데 조승수 소장은 나아가 노골적으로 문국현을 밀고 있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해서 “내 친구들에게 표 달라고 못하겠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갔다. 과연 그가 국회의원까지 지낸 민주노동당의 지도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조승수 소장은 그 인터뷰에서 ‘범국민행동의날’ 권영길 후보의 발언에는 ‘메시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미FTA, 삼성, 비정규직 문제[를] 좀더 목에 힘줘서 한 것 말고는 내용이 없었다”는 조승수 소장의 비판은 공감하기 힘들다

“정규직의 임금인상분을 일부 모아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으로 사용”하는 ‘연대임금제’를 주장해야 했다는 조승수 소장의 주장은 우려스럽다.

대의

조승수 소장이 말하는 ‘연대임금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인 ‘사회연대전략’의 최신판이다. 이런 ‘전략’은 ‘윗 돌 빼서 아랫 돌 괴기’에 불과해 전체 노동자의 몫을 늘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만 불러 올 수 있다.

이런 계급타협적 방법보다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으로 지배자들의 몫을 빼앗아 오는 게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지가 정규직 때문도 아니고 그로 인해 정규직이 덕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형택 전 대변인은 <레디앙> 기고문에서 당 지도부가 <한겨레>의 편파 보도에 항의 방문한 것을 비판했다. 비판 기사라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며 “언론이여, 민노당을 세게 비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대안은 거의 다루지 않으면서 당내 이견과 갈등만 부각해 보도한 <한겨레>에 항의한 것은 정당했다. 이상현 당 미디어홍보위원장이 지적했듯 <한겨레>는 이인제보다도 적은 비중으로 권영길 후보를 보도했고 그 내용도 부정적이었다.

범국민행동의날을 보도하면서 “당 기반 세력의 결집도 이뤄내지 못했다”거나 “‘운동의 정치’는 대중이 거리를 느끼”게 한다는 등 우파적 압력을 가하는 기사도 내보냈다.

그런데 김형택 전 대변인이 <한겨레>의 이런 얄미운 태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당 내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기사화한 것”뿐이라며 <한겨레>를 옹호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물론 “일방적 통보로 대변인실이 사라”지게 한 자민통 경향의 비민주적 당 운영 방식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나 그 이후 나타난 김형택 전 대변인의 이런 태도도 적절치는 않다.

아직 확실한 정황을 알 수는 없으나 포스터 문구(코리아연방공화국)를 둘러싸고도 잡음과 반목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대선을 앞두고 나타나는 일부 당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분열 양상은 당의 성장과 대선 도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공동의 목표와 대의를 우선하면서 우호적인 토론과 비판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이정구

1라운드는 아쉽게 끝났지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프랑스 노동자 파업의 교훈

짐 울프리스

대통령 사르코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9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프랑스의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지난주 표결 끝에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정부 요구안을 놓고 협상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지난주 화요일 전국에서 70만 명이 참가한 시위 이후 임금·일자리 삭감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고, 고등교육 사유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재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대중교통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하루 평균 2억 9천만 유로(약 4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프랑스 노동계급 가운데 가장 전투적이고 잘 조직된 부문에 속하는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 중단은 분명히 운동의 후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철도 노동자들은 자신만만한 정부와 대결했다. 사르코지 정부는 특별 연금 제도 — 일부 노동자들에게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일찍 퇴직할 권리를 보장하는 — 를 폐지할 권한을 국민들에게서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는 지난 봄 대통령 선거 때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프랑스 국민의 다수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페리티프

파업 노동자들은 또, 사회당 지도부와 노조 지도부의 반대를 거슬러서 투쟁해야 했다. 지난주에 사르코지의 대변인은 공공 부문 노동자 전면 공격에 노조 지도자들이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 연금 제도는 아페리티프[식욕 촉진을 위해 식전에 마시는 술]일 뿐이다. 다른 개혁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책임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노조 지도자들이 연금 개악 반대 투쟁에 앞장서지 않은 덕분에 정부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벌일 수 있었다. 철도 노조의 주요 상급단체인 노동자총연맹

(CGT)의 지도자 베르나르 티보는 사르코지에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티보가 파업을 계속하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자들의 협상 의지를 거슬러서 파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

사르코지의 공세를 [1984년] 영국 대처 정부의 광부 파업 탄압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 철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았다. 또, 사르코지는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노동자 집단이 연금 투쟁에서 패배를 경험했지만, 생계비 상승을 따라잡기 위한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 프랑스인의 다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비정규직화한 법률[최초고용계약법: CPE]에 맞서 싸운 청년들의 성공적인 투쟁을 지지하기도 했다.

물론 그 때 이후 사정이 변하긴 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우파들이 분열했지만, 올해 가까스로 우파들을 단결시킨 사르코지는 과거의 패배와 타협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었다.

한편, 공식 야당인 사회당은 취약하고

무능하다. 그리고 우파의 시장 지향 정책들과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펼치는 여배우 조지안느 발라스코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외쳤다. “도대체 이 사회당 놈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 우리가 [진정한] 야당이다.”

이번 파업 기간에 프랑스 언론은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의 믿을 만한 대변인은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올리비에 브장스노뿐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노동운동의 전통적 기구들은 반정부 투쟁을 지도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프랑스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가 널리 퍼져 있고 매우 현실적임에도 그런 분노를 모아줄 조직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운동의 활력과 전투성을 정치 무대로 전달하고 정부한테서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힘들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운동의 투쟁 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르코지는 잠시 철도 노동자들을 무력화시켰다. 이 때문에 의기양양해진 프랑스판 전경련인 프랑스기업운동(MEDEF)은 이제 정부에게 주35시간 노동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러나 사르코지는 아직도 다른 공공 부문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상당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학생 시위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음을 아는 사르코지 정부는 재빨리 경찰 병력을 대학 곳곳에 주둔시켰다.

지난 15년 동안 프랑스 정치를 좌우해 온 계급투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세계 경제포럼은 세계에서 작업장의 노사 대립이 가장 첨예한 나라로 프랑스를 꼽았다.

조직 대안

사르코지 집권 후 처음으로 벌어진 주요 투쟁은 그가 중요한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그 세력들은 분노를 효과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승리하려면 자신의 지도부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사르코지가 계속 주도권을 쥐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짐 울프리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이고, 런던대 킹스칼리지에서 프랑스 정치사를 가르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총선

전쟁 · 신자유주의 정권 또 하나가 쫓겨나다

지난 11월 24일 오스트레일리아 총선에서 총리 존 하워드의 보수당 정부가 패배했다. 심지어 하워드는 자기 지역구에서도 졌다. 현역 총리가 자기 지역구에서 진 것은 192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하워드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줬다. 하워드는 노동당의 대안 부재와 호황 덕에 11년

동안 장기 집권해 왔지만, 오랜 논란 끝에 올해 초 통과된 신노동법은 하워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신노동법은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고 임금을 낮추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고용주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신노동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열정적 활동이 하워드 정부를 패배시켰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

부의 대안이 흡족한 것은 아니다. 노동당 정부는 신노동법 조항들의 대부분을 그대로 두고,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대신 아프가니스탄 파병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조합 활동가, 반전 활동가, 녹색당 지지자 등은 이제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맞선 진정한 대안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임스 씨플(오스트레일리아 사회주의자)

쫓겨난 전 총리 하워드

IMF 10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나?

김창근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1997년 11월 말 한국 자본주의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간 구조조정 명분 아래 진행된 급격한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돼 버렸다.

1997년 경제위기는 1993년부터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한 결과였다. 1990년대 초반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침체에 따라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한 한국 재벌들은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에 빠졌고, 김영삼 정부는 재벌들을 위해 소위 '세계화 전략'을 펼친다. 하지만 '세계화 전략'은 그 명칭과는 달리 대외지향적인 정책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본질은 산업구조의 재편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재벌 규제를 완화해 재벌들이 기존 주력 업종을 넘어 비주력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 위기에 빠져있던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것이었다. 그런 확장의 대표적인 예가 한보철강, 삼성자동차, 인천제철 등이었다. 사실, 문어발식 확장은 한국 경제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철강·석유화학·반도체·조선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일어났다. 이들 업종은 당시 세계적 차원에서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은 국내 외 경쟁을 가속화했다.

다른 한편 김영삼 정부는 금융시장도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OECD 가입과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압력을 배경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자본을 싼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기를 원했던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기도 했다. 한국 재벌과 금융기관들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해외자본을 차입할 수 있도록 1997년경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었다.

세계화 전략

세계화 전략의 결과는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 한국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라 GDP의 40퍼센트에 육박하는 무리한 투자 붐이 일어났다. 그런 과잉투자의 결과는 1997년 초 한보철강 부도에서 시작된 재벌들의 연쇄 부도였다. 다른 한편 금융시장을 개방한 결과 과중한 단기의체가 누적됐다. 1997년 말 1천5백억 달러의 민간외채 중 1천억 달러 정도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

는 단기의체였다.

단기의체의 과중한 누적은 한국경제를 대외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 결국 1997년 중반 태국에서 시작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 금융기관들의 차입에 대한 만기연장을 거부했고, 한국은 1997년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1997년 경제위기 당시에는 위기의 원인 이 김영삼

였



2000년 기준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
OECD 국가 중 3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그에 편승한 재벌들의 과잉투자과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해외차입 때문이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따른 효율성 저하가 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됐다.

그 결과 재벌들의 과잉투자로 인한 부실은 구조조정 자금으로 구제받은 반면, IMF가 강요한 고이자율 정책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양산됐다. 당시에 시작된 정리하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 파견근로제 등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 불안정,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등을 낳고 있다. 또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되고 자유화됐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투기장이 됐고 주요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가 극도로 강화됐다.

구조조정이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켜 노동소득은 급격히 위축

GDP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1996 63.4%
2002 58.2%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절대빈곤 가구 비중

1996 5.92%
2002 11.47%

본이형성됐다. 5백조 원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 유동자본은 2000~2001년 IT붐의 붐과 이후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해 전국적 차원의 부동산 투기를 낳았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상대적 위축에 따라 유동자본이 주식시장과 해외펀드 등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거시경제적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FTA 체결

한국경제는 이렇게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면서도 4~5퍼센트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중국의 호황과 유리한 환율에 기대 매년 15~20퍼센트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폭발적인 수출 증가 덕분이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10퍼센트 전후로 하락하

면서, 만성적인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함께 점차 수출 부진이 다시 한국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양극화와 내수침체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고용안정성 증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전혀 다른 정책을 추구했는데, 그것은 전방위적인 FTA 체결이었다.

한미FTA를 비롯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FTA 정책의 목표는 IMF 구조조정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에 이은 또 하나의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일 뿐이다. 특히 한미FTA는 전기·가스·상하수도 부문의 공기업, 금융, 의료와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등 소위 '서비스 산업' 전체를 민영화하고 구조조정에 서비스 산업을 재벌들이 지배하게 해 줌으로써, 다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재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업은 물론 국제적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몰락하고, 인구 대다수가 극단적인 빈곤에 몰릴 것은 자명하다.

이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도래한 듯하다. 자본의 세계적인 지배를 거부하고 막아내는 반세계화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반세계화 운동은 자본 자체를 넘어서는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세계 금융 위기를 진단한다

이윤율 하락 경향의 경고

[편집자 주] 국내 경제자들은 세계 경제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경제 거품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크리스 하먼은 현재의 금융 위기가 30년 전에 나타난 이윤율 하락 경향을 해결하지 못한 것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금융 위기가 본격적인 불황으로 발전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중국의 호황과 컴퓨터 기술 발전이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 맑스라면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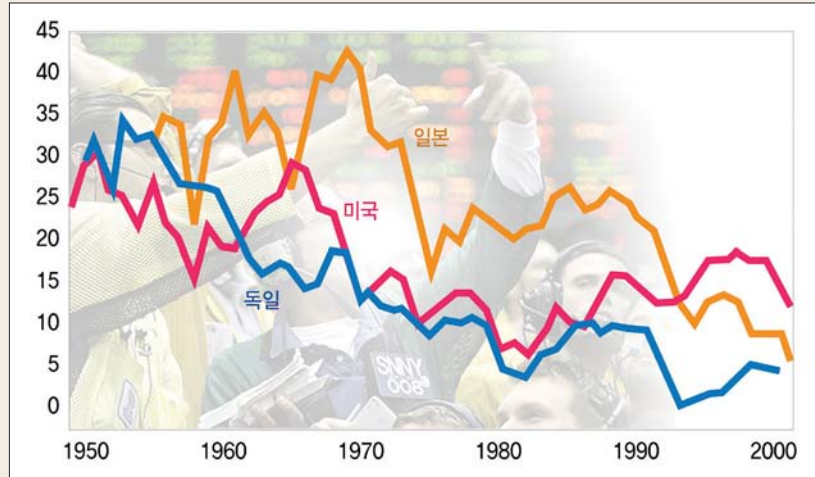
주류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상황 위기로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자신들의 경기 예측을 수정해야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중앙은행) 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2008년 미국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확률이 50퍼센트로 높아졌다고 말했고, IMF도 그런 예측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듯하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현재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현재 금융 위기는 30년 전에 나타난 근본 문제를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것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근본 문제는 칼 맑스가 《자본론》에서 분석한 이윤율 하락 경향을 말한다. 이윤의 원천인 노동보다 투자가 더 빨리 늘면서 투자에 대한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경제학자 대부분이 1960년대 말부터 1982년 사이에 이윤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데 동의한다. 그 뒤 이윤율은 맑스도 지적했던 메커니즘을 통해 약간 회복됐다. 지난 두 번의 경기 불황 동안 대기업을 일부와 대국 경제 하나(옛 소련)가 파산한 덕분에 다른 이들이 성장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작업량을 꾸준히 늘리고 임금을 줄여(특히 미국에서 그랬다) 국제적으로 임금에 비해 이윤으로 가는 몫을 늘렸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이런 방법을 통해, 이윤율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의 절반을 회복할 수 있었을 뿐이다.

어쨌든, 그 덕분에 일부 국민경제들은 얼마 동안 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독일과 일본, 1997년 이전 아시아 호랑이들, 1990년대 후반 미국,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대표적 예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이윤을 회복으로 자본주의 체제 전반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거나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지난 15년 동안 거의 정체했고, 아시아 호랑이들도 1997년 이후 성장률 증가세가 둔화했고, 유럽 대륙 대부분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낸다. 첫째, 낮은 이윤율과 불균등한 성장률 때문에 기업들과 기업이 자리 잡은 국민국가들 사이에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임금, 작업량, 노동시간과 '사회 임금'을 구성하는 사회복지 등이 악화됐다.



1960년대 말부터 급격히 하락한 미국, 일본, 독일의 제조업 순이익률

둘째, 자본가들은 기존 이윤으로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절박하게 찾았고, 반복적으로 투기 활동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 후반 주식시장과 닷컴 기업들이나 2000년대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투기가 대표적 예들이었다. 그러나 투기가 새로 이윤을 창출하지는 못하므로 투기의 물결이 끝나기 전에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

금융 위기

일부 사람들은 신행 컴퓨터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미국에서 이런 주장을 특히 더 많이 한다)이나 중국의 고도성장 덕분에 자본주의가 앞서 말한 문제에 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테너셔널 소셜리즘>이 주최한 정치경제학에 관한 매우 성공적인 토론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소수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가 '장기파동'의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함의는 이렇다. 이윤율이 높고 늘어나는 시기에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싸우지 않고도 자본가들로부터 높은 실질임금을 얻고, 정부들은 제2차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전성기 때처럼 긍정적 개혁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틀렸다. 미국 경제가 전산화 덕분에 생산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컴퓨터 산업과 도매업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었다.

전산화는 양면적 효과가 있다. 신행 컴퓨터 구매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투자비용은 줄어든다. 그러나 컴퓨터는 금방 구 모범이 된다. 어떤 기계가 쓸모없어질 때까지 보통 15~20년이 걸리지만, 컴퓨터는 3~4년이면 그렇게 된다. 기업들은 과거보다 더 빨리 신행 장비에 투자해야 하고, 미래 이윤은 그만큼 줄어든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력평가지수(PPT) 기준으로 세계총생산의 15퍼센트에 불과하며, 전 세계 이윤을 계산할 때 더 중요한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세계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중국은 국제 경쟁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세계시장에 성공적인 경쟁자가 나타나면 불안정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간 무역에 관한 논쟁은 그런 불안정의 표현이다. 사실, 현재 금융 위기가 마찬가지다. 중국의 성장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중국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일부 의존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등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중국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해결되지 않는 근본 문제의 산물이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린스펀과 동료들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 자본주의는 매우 혼란스런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예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 체제 근저의 문제는 한 가지 매우 중대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임금, 노동조건, 사회복지를 약화시켜 이윤을 높이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총리 고든 브라운이 공공부문 임금을 공격하고, 프랑스에서 사르코지가 '반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맞선 파업 투쟁들도 계속될 것이다.

.....

크리스 하먼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이자 <인테너셔널 소셜리즘> 편집장이다. 국내 번역된 책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쉽게 읽는 마르크스주의>, <파배한 혁명>, <민중의 세계사> 등이 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류된 주택 - 투기로 인해 이윤을 저하 위기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 한국 운동은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보여 줘 왔다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29

맑스주의와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현실적이다. 그리고 심각한 위협이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심지어 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미국 정부조차 이제는 기후 변화의 현실성과 심각성을 인정한다.

지금 당장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오를 것이고 그리 오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 홍수, 폭풍 등의 재앙으로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될 것이다. 기후 변화가 그 수준마저 넘어서도록 내버려둔다면, 인류뿐 아니라 무수한 생물 종(種)도 상상할 수 없는 참사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직면해서 가장 광범하게 나타나는 반응은 기후 변화가 너무 중대하고 너무 절박한, 그래서 정치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주류 언론이나 환경 운동가들이 모두 그렇게 말한다.

기후 변화는 결국 인류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단결해서 기후 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자유주의자들·아나키스트들·맑스주의자들은, 특히 맑스주의자들이 저마다 차이를 묻어두고 자신의 주의·주장, 특별한 이해관계, 철학적 목표들을 뒤로한 채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즉 지구를 구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은 모두 그럴듯한 상식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보면 된다. 우리가 정말로 뽀짝이라도 합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었다면, 또는 정치적·경제적 권력자들 같은 주요 행위자들의 상당수가 정말로 저마다 차이를 묻어두고 자신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뒤로한 채 기후 변화 문제를 다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정부 조치

첫째, 미국·러시아·중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국 정부는 모두 석유나 석탄 등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파력·태양력 같은 에너지원으로 대폭 교체하는 조치들을 즉시 실행했을 것이다.

둘째, 그들은 이런 조치를 보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건물 난방용 에너지를 대폭 절감하기 위해 모든 건물의 단열 효과를 높이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을 비롯한 공공 건물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승용차·트럭·비행기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기 위해 친환경 대중교통, 특히 버스와 기차에 막대한 공공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교통이

일단 안착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적 제재, 예컨대 도심 주행 차량이나 도시간 장거리 운행 등에 대한 법률적 제재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많은 조치들, 실행 가능하고 마땅히 실행돼야 할 조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발전들을 정부가 주도하고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을 겨냥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 조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각국 정부와 지배계급들이 진지하게 어떤 문제를 다루거나 위협에 대처할 때 **항상** 하는 일이다. 정부가 은행 강도 대처 방안이랍시고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공공 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의 개입에 의존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조지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장의 힘에 맡기자고 말한다거나, 이라크 침략 작전은 최대한 많은 미국인들이 자력으로 바그다드까지 가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사실, 어디서나 지배계급들이 자신의 요구를 실현할 국가 기구들을 만든 이유는 바로 중앙집권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 세계의 합리적 행동이라는 몽상에서 눈을 돌려 실제 현실을 바라본다면, 가장 절실한 일들 가운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24시간 가동되는 스코틀랜드 중부의 BP(영국석유회사) 정유단지 - BP가 매상을 1백만 달러 늘릴 때마다 261톤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온다

사실과 개인의 태도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해결책 — 다른 문제들에서는 당장 기각됐을 — 이 채택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철저한 실패의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자본주의의 우선순위와 논리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주요 경제 권력은 거대 기업들이 쥐고 있다.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백대 기업 가운데 상위 10개는 다음과 같다. 1위 월마트, 2위 엑손 모빌, 3위 로열더치셸, 4위 영국석유회사(BP), 5위 제너럴 모터스, 6위 도요타, 7위 세브런, 8위 다임러크라이슬러, 9위 코노코필립스, 10위 토탈. 이 10개의 회사 가운데 9개가 석유·자동차 경제에 절대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경쟁 논리

자본주의의 다른 주요 권력 중심은 주요국의 국가 기구들이다. 그러나 이 기구들도 앞서 말한 거대 기업들과 수많은 끈으로 직간접 연계를 맺고 있다. 더욱이, 이 국가 기구들은 저마다 자국의 자본주의를 위해 다른 나라 국가 기구들과의 경쟁에 몰두한다. 따라서 이 국가 기구들은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들이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이탈해 자신을 앞지르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다.

예컨대, 미국 지배계급은 미국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안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고 그래서 중국이 경쟁에

서 앞서나갈까 봐 두려워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그랬다가는 미국 기업들의 이윤이 타격을 받고 미국 경제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지배계급도 미국이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까 봐 두려워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쟁 논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서 기업들이든 각국 정부들이든 세계 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류 전체와 지구의 미래를 걸고 모험을 하는 쪽을 기꺼이 선택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분명한 정치를 포기하거나 자신만의 맑스주의 이데올로기를 뒤로한 채 기후 변화 저지 운동에 나서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다. 현실은 오직 맑스주의의 자본주의 분석만이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훨씬 더 중요하게는, 기후 변화가 재앙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막으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이 누구인지 보여 준다.

그리고 노동계급 대중운동과 연결된 사회주의 정치만이 그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인류를 재앙에서 구하는데 필요한 변화들을 강행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힘을 동원할 수 있다.

.....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maks),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노동자들을 매정하게 내친 명동성당 사목회

1백50일 넘게 ‘고난의 행군’ 중인 뉴코아 노조가 새로운 투쟁 거점을 만들기 위해 명동성당 천막농성을 시도했다.

그런데 명동성당 측은 뉴코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청와대로나 가서 평강을 부리라!”며 노조의 천막을 철거해 버렸다.

뉴코아노조 박양수 위원장과 여성 조합원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지만 성당은 막무가내였다.

명동성당 주임신부와 사목회는 천막을 철거하며 “우리는 비정규직과는 상관없다”며 “민주화 운동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던 시절이 아니”라고 말했다.

주임신부는 천막을 철거하며 “수배자 2명은 성당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목회가 이틀마저 내쫓겠다고 하자 모른 체했다. 결국 수배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성모 마리아 상 앞 맨바닥에서 노숙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박양수 위원장은 “네 달 동안의 수배 생활보다 지난 이틀이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더 힘들었다”며 명동성당 측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연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은 이런 소식을 듣고 뉴코아·이랜드 투쟁기금 지원을 결정했고, 로



철거되는 천막을 부여잡고 절규하는 뉴코아 노동자들

마교황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뉴코아노조 지도부의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로 했다. 각국 노조 대표자들 3백여 명은 한국대사관까지 항의 행진하며 국제적 연대를 보여 줬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11월 27일 대학로에서 7백여 명이 모여 비정규직 투쟁 연대 간부 파업을 하기도 했다.

여론의 압력 때문에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랜드 회장 박성수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여

론을 뒤늦게 눈치챈 명동성당 측은 수배자들까지 나가달라는 말은 못하고 있다.

명동성당 측의 행태는 예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예수는 ‘죄인’으로 낙인찍혀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어울렸다.

이제라도 명동성당 측은 잘못을 반성하고 87년 민주화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인 뉴코아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거점 삼아 정의로운 투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강동훈

코스콤

정인열 부지부장 인터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싸워 이기는 날이 빨리 오길 ”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겪는 끔찍한 차별을 고발해 온 코스콤비정규지부의 파업 투쟁이 벌써 80일 가까이 됐다.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지부장은 코스콤 본사 앞에 세운 ‘통곡의 탑’에서 22일간 단식 농성을 하다가 탈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유일한 여성 조합원으로서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돼 온 정인열 부지부장을 병상에서 인터뷰했다.]

“우리 조합원들은 한이 많이 쌓여 있어요. 20년 동안 계속된 차별 때문에 억눌려온 게 많았죠. 3~4년 동안 교육받을 것을 투쟁 속에서 한두 달만에 다 습득했어요. 또 뉴코아·이랜드 투쟁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투쟁하면서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연대의 힘으로 이겨냈어요. 파업 출정식 때나 철탑 농성장 침탈 시도 때 우리는 고작 80명인데 경찰은 6백 명씩 몰려왔거든요. 연대하러 온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죠. 우리도 다른 투쟁 작업장에 열심히 연대하러 다니고 있어요.

“특히 뉴코아·이랜드 동지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 분들도 어려운 조건인데, 농성 현장에 자주 와 주시고 많이 걱정해 줘요.

“코스콤 이종규 사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중

규 사장이 말하는 ‘대화’는 하청업체와 비정규지부 간의 대화죠. 코스콤이 원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거죠. 잠시 비껴가려는 것뿐이에요.

“코스콤 정규직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은 자기 무덤을 판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같이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서 제명된 것은 마음 아파요. 집행부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전체 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명을 쓰게 됐고, 지도부의 결정에 조합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가 되면 정규직 조합원들도 지도부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지도부도 교체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랜드와 함께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만큼 책임감도 큼니다. 우리가 이겨서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스스로 조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인터뷰·정리 오정숙

부평구청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

지난 9월 30일 해고된 부평구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11월 12일 원직복직됐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무기계약 전환’도 쟁취했다.

부평구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였다. 월급은 교통비와 식대를 빼면 50~60만 원 정도였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 여성 노동자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7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다.

그러나 부평구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시행되는 10월 1일을 앞두고 인건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비정규직 25명을 해고했다.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이 7월 1일 비정규직 약박 시행을 앞두고 대량 해고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역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려 부평구청 앞 규탄 집회, 출근 투쟁, 구청장실 점거 등 지속적인 연대 투쟁을 벌여 왔다.

무엇보다 부평구청 정규직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의 실질적인 연대가 구청 측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부평구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는 이런 연대의 결과였다. 이번 승리는 다른 구청들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첫걸음이다.

최영준

탄광 진폐 재해자 투쟁

“우리는 연탄재가 아니다”

호화 카지노로 복직거리는 강원랜드 입구에서 몸도 가누기 어려운 노령의 진폐 재해자 수백 명이 한 달 넘게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며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1970~80년대 ‘산업역군’이라 불리며 탄광촌에서 “열심히 일한 죄”로 진폐증을 앓게 된 이들은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 하고 절규하고 있다.

진폐 재해자들의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재해자 대다수는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3~4만 명으로 추산되는 진폐환자들 중 입원요양 치료를 받는 사람은 3천여 명에 불과하다. 9가지 합병증에 걸려야만 입원요양 대상자로 판정하는 기막힌 제도 때문이다.

‘산업 역군’

입원요양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앓고 있는 진폐 환자 중 절반이 돈이 없어 치료도 못받고 있다. 이들은 그야말로 “연탄재”처럼 버려진 것이다.

노동부는 2001년 월 73만 원 생계비 지원과 요양 심사 판정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다가 2004년에 이 약속마저 폐기해 버렸다. ‘폐광지역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내세우며 건립된 강원랜드는 매년 3천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진폐환자 복지에는 단 1억 원도 쓰지 않고 있다.

진폐 재해자들은 지난 대선 때 직접 병원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처우 개선에 힘 쓰겠다”고 약속한 노무현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진폐 재해자들은 강원랜드 점거 등을 결의하고 ‘제2의 사북사태’를 경고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7백여 명이 강원랜드 진입을 시도하며 투쟁을 벌였다.

노동부는 뒤늦게 진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생계비 지원 등 2001년에 약속한 사항부터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박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파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12월 3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맞불〉 거리 판매에서 확인한 ‘삼성범죄공화국’에 대한 분노

지난주 〈맞불〉 거리 판매를 하면서 ‘삼성범죄공화국’ 사슬이 검찰과 법원 그리고 청와대까지 깊게 연결돼 있는 사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맞불〉 66호는 지난주 서울 시내 주요 환승역과 거리 등 여덟 곳에서 순식간에 1백30여 부가 판매됐다. 또, 삼성비자금 진상 규명 서명 운동에도 5백여 명이 동참했다. 특히 퇴근시간 신촌역과 강남역 등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명에 동참했다. 이 서명운동은 ‘다함께’도 참가하고 있는 ‘삼성 이견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권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이 조직하고 있다.



신문을 구입한 사람들은 삼성의 범죄를 고발한 ‘죄’로 3년째 수감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인터뷰와 이견희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저지 시위

를 벌여 ‘괘씸죄’로 출교당한 고려대 학생들의 소식 등 삼성이라는 ‘골리앗’에 맞선 ‘다윗’들의 투쟁에 관심을 보였다.

지하철 무가지에 익숙해져 〈맞불〉을 그냥 집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독립적이고 분명한 주장을 펴기 위해 삼성 같은 기업의 광고를 싣거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다”고 설명하면 싯뜻 취지에 공감을 표했고, 지지금까지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명운동과 신문 판매를 통해 삼성에 반대하는 운동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대중의 정서를 읽을 수 있었다.

김태현

사회보험노조 투쟁과 민주노동당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통합징수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나는 파업 이틀째인 20일 시위에 참가했다. 3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보며 분노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노조 대표자들과 재경위 의장을 항의 면담했고, 재경위 전체회의의 통과 직후에는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통합징수법이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19일에도 신속히 논평을 발표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강행된다면 이에 반대할 것임을 밝

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호 기사에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정부 논리의 허구를 거슬러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명히 지지하지 않고 있다. … 국회 법안 통과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부분은 심상정 의원의 활동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반쪽짜리 진실만을 전달하게 됐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이 투쟁을 지지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4대 사회보험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심상정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노동당 전체 차원에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오정숙

캐나다산 광우병 쇠고기까지 먹으라고?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려 하자, 캐나다도 부위와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했고, 그 뒤에도 무려 11번이나 더 발생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것은 한미FTA의 원만한 비준을 위해서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캐나다산은 수입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본과 광우병국민감시단은 1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정말이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한 정신 나간” 짓이다.

박건희

“우리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원한다”

11월 24일에 열린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에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홍세화 입시폐지국민 공동대표는 “한국 교육은 해외 뉴스의 ‘밈거나 말거나’에 나를 만큼 야만적”이라고 고발했다.

송이초등학교 4학년생 강선우 어린이는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느라 같이 놀 수가 없다며, 일류 대학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현실을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참가했다. 권 후보는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만이 만병의 근원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의 비자금만 모두 합쳐도 무상교육·대학평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전면내내 걸고 처음 열린 이 집회는 입시폐지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열망을 보여 줬다.

이슬기

대학 맑스주의 포럼

단국대
선출되지 않은 권력 — 삼성은 어떻게 한국사회를 지배하는가?

연사: 강영만(삼성 이견희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저지시위 참가자, 고려대 출교생)
일시: 12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제2공학관 102호
문의: 010-4540-9525

한국외대·경희대
차베스 개헌 논쟁 — 베네수엘라 혁명은 어디로 가는가?

일시: 12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211호
문의: 011-9937-1755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02-2271-2395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삼성 제국’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라

한규한

김용철 변호사의 추가 기자회견은 ‘삼성 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비리를 다시 드러냈다. 아직 모든 것을 밝힌 게 아니라는 데도 말이다.

심지어 삼성전략기획실 사장 김인주는 계열사 비자금 자료를 빼낸 삼성 직원 강부찬을 “죽여 버릴까” 하고 진지하게 모색하기도 했다. 게다가 삼성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의 ‘인맥지도’까지 만들어 ‘관리’를 시도했다. 범죄를 덮으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돌려막기’를 자행해 온 것이다.

‘삼성 제국’은 “노동자의 피눈물”로 지어졌다. 이견희는 “비자금이라는 검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사회복지에 돌아가야 할 이윤에다 빨대를 대서 착복하고 [그] 부스러기로 국가의 인재를 포섭·오염시킨 것이다.”(사제단 김인국 신부)

‘삼성 제국’의 노동자 탄압은 실로 조지 오웰의 《1984》를 떠올리게 한다. 삼성 전자에서 퇴사한 한 노동자는 “사원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사원증 케이스에 무선 송출기가 붙어 있어 사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폭로했다.

또, 삼성 한 간부가 폭로한 것을 보면, 회사 안 컴퓨터에서 “〈한겨레〉나 〈오마이뉴스〉에 접근을 시도하면 ‘불법사이트’라고 경고하는 문구가 바로 뜬다.”

이런 삼성의 범죄와 비리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삼성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70퍼센트가 넘었다. 애초에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서로 상대방이 수용하지 못할 내용을 특검법에 집어넣으며 법안을 좌초시키려 했다. 저들의 이런 꼼수가 각당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 삼성 관련 의혹을 모두 망라하는 특검법을 만들어 냈다. 결국 저들은 여론의 눈을 의식해 울며 겨자 먹듯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했다. 뒤늦게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려 했



‘삼성 제국’에 맞선 투쟁은 특검에만 의지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동력인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만 대세를 거스르진 못했다. 검찰도 이견희와 이학수 등을 출국금지시켜야만 했다.

그래서 재벌과 그들의 언론은 화가 나 미쳐 날뛰고 있다. 삼성의 한 임원은 “우리를 건드리면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고 협박했다. 주류 언론들은 “좌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삼성 죽이기의 꾀판에 특검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동아일보〉), “경영위기 오면 ‘제2의 IMF’”(〈파이낸셜뉴스〉)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그물망

삼성의 최고 우등 ‘장학생’ 노무현은 마지못해 특검을 수용해야만 했다. 특검 거부 때문에 사태가 더 험악하게 발전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검이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시사IN〉 안은주 기자는 현 정부 관료가 삼성 관계자와 함께 찾

아와 김용철 변호사 특집 기획을 ‘중재’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최근 MBC 〈뉴스후〉는 “참여정부”라는 이름도 삼성구조본의 작품이며 노무현 정부 하에서 삼성에 비우호적인 인물들은 체계적으로 ‘팽’ 당했다는 것을 심층 취재해 고발했다.

지배자들은 삼성 특검이 자칫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범여권은 특검 통과에 합의해 놓고도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좌불안석이다.

이명박 캠프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전 우익은행장 황영기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최근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삼성의 우익은행 계좌 불법 주적 사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이회창은 특검이 ‘차떼기 잔금’ 조사로 번질까 봐 전전긍긍이다. 한나라당, 범여권, 사법부, 재경부, 금감원, 국세청, 언론사 등 한국 사회 주류 세력 모두가 삼성

의 그물망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삼성 비자금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삼성 제국’에 맞서 정의를 세우는 투쟁은 특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특검 추천권자는 김용철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대한변협이고, 거부권 운운하던 노무현이 특검 임명권자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범여권의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선 이후 특검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다.

대중 투쟁의 압력만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진정한 동력일 것이다. 오는 12월 1일 2차 범국민행동의날은 삼성에 맞선 투쟁을 확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삼성 재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는 정치세력”(〈한국일보〉 논설위원 고종석)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대선 도전도 ‘삼성 제국’에 맞선 저항을 고무할 수 있다.

고려대 출교와 항소 뒤편 삼성이 있다

김지윤(고려대 출교생)

고려대학교에는 ‘삼성관’이 있다. 고려대 당국은 삼성이 건설비 4백억 원을 깎아 준 대가로 건물 이름을 ‘삼성관’으로 짓고 내친 김에 이견희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그러나 아들 이재용에게 불법 증여를 하고 핸드폰 위치 추적과 협박·납치 등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이견희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이것은 고려대 당국이 교육기관의 양심을 저버린 상징적 사건이었다.

고려대 경영대 학생들은 삼성부패공화국의 일등공신인 삼성 부회장 이학수의 이름을 딴 강의실에서 ‘삼성의 말레이시아 현지화 전략’ 과목을 듣는다. 학교 당

국이 삼성의 부패와 비리 과목을 개설해 준 셈이다.

이런 역겨운 행태 때문에 2005년 이견희 박사 학위 수여식 때 1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 기업 총수들의 축하를 받으며 박사학위를 받으려던 이견희의 계획은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로 물거품이 됐다. 이견희는 결국 이사장실에서 조용히 박사학위를 받고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고려대 총장이 즉시 사과하고 보직 교수 전원이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삼성에 ‘사죄’했고, 시위 학생들을 징계하려 했다. 그러나 반(反)삼성 여론이 확산되자 이견희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학생들이 계속 투쟁한 덕분에 고려대 당국의 징계 시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이듬해 고려대 당국은 눈엣가시였을 이 학생들을 본관 밤샘 농성을 벌미로 결국 출교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견희 학위수여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것에 대한 ‘과소죄’라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은 6백 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며 학교의 조치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출교에 반대하는 학생·교수·시민사회단체 등의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4일 법원의 출교무효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삼성 부회장 이학수가 이사로 있는 고려대 재단은 이 판결에 불복해 끝내 항소했다.

고려대에서 출교돼야 할 것은 이견희와 이학수다. 삼성의 추악함이 폭로되고 있는 지금 고려대 당국은 이견희에게 수여한 명예박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고려대 재단은 이학수를 이사직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

고려대 출교학생들은 대학을 기업으로 만들려는 학교 당국에 맞서 투쟁할 뿐 아니라 삼성부패비리공화국에 맞선 투쟁에도 함께할 것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인터뷰

“이건희 왕국 해체를 위해 싸웁시다”

민주노동당 대선공동선대위원장 심상정 의원에게서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과 투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그동안 심상정 의원은 삼성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 왔고, 최근에는 삼성의 우리은행 계좌 불법 추적 사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을 짚어 주십시오.

재벌2세인 이건희 회장이 재벌3세인 이재용 씨에게 삼성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법부·행정부·입법부를 매수하고 청와대까지 뇌물로 쥐락펴락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삼성 특검을 통해 재벌3세 경영권 세습의 전모가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이 거부권 운운하며 사실상 특검 도입을 꺼려 왔는데, (이 인터뷰는 노무현의 특검 수용 전에 이뤄졌다)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소위 민주화 정부 아래서도 정경유착이 계속 되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와대도 삼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 특검 거부권이라는 ‘백태클’을 걸지 말고, 삼성 특검 법안을 하루 빨리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돈과 머리와 사람을 삼성에게 빌려 ‘삼성 봐주기 정치’를 해 온 청와대는 스스로

삼성과의 유착관계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삼성 특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삼성 구원투수’ 노릇을 고집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 비자금 청문회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화를 얘기할 때 그 본질은 사회경제적인 민주화에 있다고 봅니다. 곧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가 됐는가는 회의적입니다. 정경유착 문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권 우위의 정경유착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자본 우위의 정경유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삼성을 건드리면 국가 경제가 망한다는 반대 논리도 있는데요.

삼성 특검이 기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경제 단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편법 경영권 승계, 탈세, 비자금 살포를 용인해 줘야 기업 의욕이 살아난다는 것은 천민재벌의 비자금 중독증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국가권력을 매

수해 탈세와 불법을 저지르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어야만 경제질서는 물론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재벌, 특히 ‘삼성 왕국’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재벌개혁론, 재벌해체론, 재벌활용론 등 재벌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재벌, 곧 삼성그룹을 이건희 왕가와 분리시켜 건전한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현재 1퍼센트 미만의 재벌 총수일가 지분에 의해 2백3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자동차 등에서 보듯 온갖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 또는 통합신당 등의 범여권 후보들이 삼성을 개혁할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등의 범여권 후보들이 삼성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

기 때문이죠. 국회의 삼성 특검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건희 회장을 구하려고 쌍끌이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삼성공화국을 이건희 왕조와 분리시키고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에서 민주노동당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삼성 이건희 왕국 해체에 민주노동당은 ‘당운’을 걸겠습니다. ‘권영길 법안’이나 다른 없는 삼성 특검법을 선거운동 초반에 집중 홍보하는 것은 물론, 삼성의 경영권 세습과 노동자 탄압 등 불법행위를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경제권력을 견제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이뤄나갈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규탄 및 이건희 구속, 노동 탄압 중단,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

일시: 12월 7일(금) 오후 2시
장소: 삼성본관 앞



“삼성에 노조만 있었어도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것”
-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부친

지난 11월 20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발족했다.

대책위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은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호소해 구성됐다. 속초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황상기 씨는 “삼성에 노조만 있었어도 내 딸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이 산재를 은폐하려 한다. 더는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전자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

체 웨이퍼 세정작업을 했던 황유미 씨는 2005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고 올해 3월 꽃다운 23살의 삶을 마감했다. 같은 일을 한 이숙영 씨도 2006년 6월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두 달 만에 사망했다.

황유미 씨의 유족이 알아낸 결과, 2005년 8월경 기흥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던 황민웅 씨도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또, 최근 7년 동안 기흥공장에서 최소 6명의 백혈병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5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한국 경제 일등공신’ 삼성반도체 신화 속에 죽어간 노동자들

이종란

신세계 이마트 해고자,
민주노총 경기본부 법규차장

간 이 공장을 거쳐간 수만 명의 노동자들 중 얼마나 많은 백혈병 환자가 발생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하나의 가족”을 모토로 내세우는 삼성은 “가족”들 중 여섯 명이나 백혈병으로 쓰러졌는데도 “개인 질병”이고 “우연의 일치”라며 “산업재해라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억박질러 유족들을 울렸다.

또 삼성은 고인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끈인 동료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그러는 사이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유해물질 사용 기록을 없애고 유해공정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삼성과 정부는 백혈병을 비롯해 삼성전자반도체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의 건

강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병들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동시에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이다.

대책위는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생 진상을 규명하고 삼성자본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동안 ‘세계화 시대의 첨단 산업’, ‘국가 경제의 일등공신’ 등으로 미화돼 온 반도체 산업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해 온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지지·응원과 제보는

<http://cafe.daum.net/samsunglabor>
(백혈병대책위 카페)